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7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1개월 연속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도민과의 현장 소통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김 지사로부터 민간·군공항 이전, 의과대학 설립 등 핵심 현안과 호남 정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미래산업 집적화... 권역별 균형발전 힘쓰겠다”

▲민선 8기 2년 차 도정 방향은?

-대전환의 시대,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이 되도록 더 단단히 준비할 계획이다. 전통의 농도(農道), 수산도(水産道)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항공,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부권에 이차전지 등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 민선 7기에 쏘아 올린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바람연금 공유형'으로 추진하고 그린수소 에너지 섬, 묘도 블루수소 생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

솔라시도 전남형 기업도시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벨트, 재생에너지 기반 최첨단 스마트 시티, 녹색 융합 클러스터, 솔라시도 수상공원장 등을 지어 서남권 경제와 관광의 판을 바꾸겠다. 남해안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으로 발돋움 시키겠다.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이 내년부터 10년간 시작된다. 전남은 1조5천억원 정도 투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전남을 하나의

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군공항 이전 재원 중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전 대상지역 지원 규정과 이전 대상지역 지원사업 '예타 면제' 등이 담기고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빠진 시행령(안)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을 전남 서남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전 대상지역에 항공기 정비 산단을 비롯해 K-푸드 융복합 산단, 재생에너지 전용 산단 등을 지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무안지역 반대 여론을 반전시킬 복안은 있다.

-군공항 이전은 지역민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군민 의견을 모을 속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 최근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반대도 있지만 무안군민의 38%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언론의 조사에서는 지역민의 46.1%가 군공항 이전 적합지는 무안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다만, 이전 반대 이유 가운데 61.9%가 생활 소음 문제로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



권 지역민의 행정적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지역의 신산업을 이끌어 도내 균형발전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최근 여수·광양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됐고 이차전지·수소·탄소소재 등 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순천·광양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중심으로, 여수 묘도를 수소 산업 등 에코 에너지 허브로 키우겠다.

중부권은 장성의 반도체, 나주의 에너지, 화순의 바이오, 장흥의 생물의약 등 미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집적화하고 곡성·구례·담양 등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호남 정치'가 실종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 정치'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야, 세대, 남녀, 이념 등 다양한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호남 정치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약화된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챙겨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임에도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아 '호남 정치'가 실종했다는 안타까운 지적이 있음을 잘 안다. 민주당이 쌓았 문제를 비롯해 독립의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호남 현안에 당 차원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이 좀 더 낮은 자세,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정치 혼돈의 시기, 민주당의 본산(本山)으로 호남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하다. 위기는 기회다. 호남 정치의 위상을 끌어올릴 역량있는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탁해야 한다. 시대를 선도하는 대통합 정치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

▲지역의 어른으로서 '김영록 만의 색깔 있는 정치'를 보여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데.

-재선 도지사로서 지역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깨가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로 나름의 정치적 역할과 소명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있다. 단순 보여주기식 정치 행동이 아닌,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정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김영록'이라는 이름 석 자 내걸고 불철주야 뛰고 있다. 매사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껏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누볐고 도민과 소통했다.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과감한 결단으로 성과를 이뤄내며 '판교와 특심의 리더십'이라는 평도 받았다. 더불어 잘사는 대통합 세상을 위해 국민 대통합을 이끌고 소통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겠다. 지역과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현안에 집중하며 도민 행복, 대도약 전남을 이뤄내겠다. /김재정기자

“ 민선 8기 2년 차 도정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 속도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동시 이전 서남권 발전 원동력
실사구시 주안점... 모든 답 현장에 있던 생각으로 소통
호남 정치, 시대 선도하는 대통합 정치 바로미터 돼야 ”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을 구축하고 서남권에는 전남형 트램,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등을 놓을 계획이다.

농수축산업의 미래 AI 생명산업화에도 힘써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스마트팜·스마트양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0개월 만에 38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를 비롯해 청년문화센터 조성, 청년 노동자 주거비 지원 등으로 생활인구 확대, 청년 유입 유도 등 인구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담이 적지 않았을텐데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는.

-지난 5월 공항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지역민께 큰 절로 호소했다. 큰 절까지 하며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는 앞으로 5년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골든아워이자, 무안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설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국가계획에도 명시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국제선 다변화, 활주로 연장, KTX 무안국제공항역 신설 등 인프라 구축비가 최소화돼 더 많은 지역 발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최

한 잘 알고 있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 비행경로를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광주공항보다 1.4배 넓은 353만평 규모로 짓고, 소음 완충지역 110만평을 추가 확보해 소음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 법적 소음 보상 지역의 구역도 필요하다면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소음 방지 창호(문틀) 지원, 방·난방 시설, 태양광 설비 등 소음 피해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산업소득 감소, 재산권 행사 제한, 연료 발암물질 포함 등 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자주 열어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 무안군민, 도민들도 좀 더 열린 마음,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바라봐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간·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광주시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까지 아우르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난 4월 특별법이 만들어져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쉬운 점도 있다. SOCA 주민숙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빠져있고 TK신공항 특별법과도

다른 점이 많다. 전남도는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꾸준히 논의하겠다. 공항 문제 해결의 키 포인트는 지역민의 뜻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중앙 정치권과도 논의하고 연대해 지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전 대상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해법은?

-지난 8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확충방안 논의'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의사 수 부족, 필수 의료 대책 마련, 수도권-비수도권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관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꿔왔던 공중보건의 부족, 지역 거점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구인난 등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쌓이고 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30년 숙원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상급 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다. 의사협회의 입장이 완고하지만 여건이 비슷한 경북 등 타 시·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의료 취약지에 의대 신설'이 정책화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공약 중 하나인 동부통합청사가 곧 개청한다. 서남권에서는 여전히 동부권 편향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은?

-전남도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먼저, 도내 균형발전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균형성과담 당관실'을 만들어 중앙과 연계한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내 균형발전에 역량을 할 계획이다.

서남권의 경우 최근 서남권 '신 활력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전남형 트램' 건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드렸다. 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 해상풍력 발전단지, 섬과 갯벌 등 해양관광,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해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동부권엔 곧 동부통합청사가 문을 연다. 동부

광주매일신문 '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연중 캠페인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협의회'를 가동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여건들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 온 광주매일신문은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합니다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